

지역 제조업체 63% “중국산 공세에 매출·실적 영향”

광주상의 조사...판매 단가 하락 압박·내수거래 감소 등 우려 기술 격차도 추월 당했거나 비슷해졌다 답변도 과반 넘어서 저가·물량 공세 정부 차원 보호 대책, 연구·개발 지원 필요

중국산(産) 제품의 물량 공세에 지역 제조업체들의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 제조업 10곳 중 6곳은 이미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에 피해를 받고 있거나 적지 않은 시간 내에 매출과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중국 제조기업들의 기술력이 급상승하고 있는 데다 중국 내 완제품 재고율도 높아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5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15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2.4%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실제 매출·수주 실적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현재 영향은 없으나 향후 피해 예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1%나 됐다.

지역 제조업체들이 현재 겪고 있거나 향후 가장 우려되는 것은 '판매 단가 하락 압박'이었다.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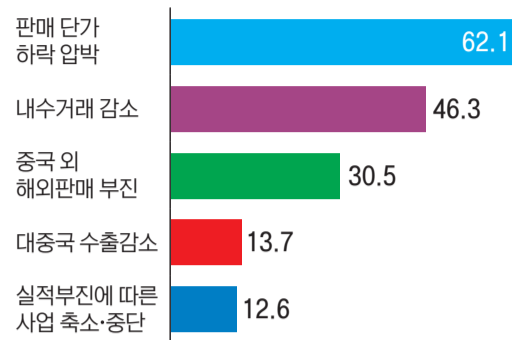
기업 62.1%가 이에 대한 피해를 우려했는데, 아무래도 저렴한 인건비, 재료값 등으로 국산에 비해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이 많아지면서, 거래처들의 단가 하락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은 '내수거래 감소'(46.3%)와 '중국 외 해외판매 부진'(30.5%), '대(對) 중국 수출 감소'(13.7%)를 우려했고, 심지어 '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축소·중단'(12.6%)을 걱정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과거 'B급' 혹은 '불량품' 취급을 받았던 중국 제품들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품질경쟁력이

■ 향후 우려되는 중국산 제품 피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응답비율은 5.9%였지만, '비슷한 수준까지 추격당했다'와 '우위에 있으나 기술격차 축소'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25.7%, 36.2%나 됐다.

아직까지 중국보다 품질과 기술력에 우위에 있는 기업들조차 대부분 중국의 추월 시기를 5년 이내(1년 이내 4.9%, 2-3년 이내 23.1%, 4-5년 이내 41.3%)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최근 중국 내 완제품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중국이 광주·전남 수출 2위이라는 점도 지역 제조업체들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완제품 재고율은 코로나 기간 소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0년 10월 6.94%에서 2022년 4월 20.11%로 급상승했다. 이후 중국 기업이 과잉 생산된 재고를 해외에 저가로 수출하며 재고율은 2023년 11월 1.68%까지 떨어졌으나, 중국이 좀처럼 경기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난 6월 기준 4.67%로 높아진 상태다.

중국의 추격에 지역 제조업체들의 대응방안으로는 '고부가 제품 개발 등 품질향상'(55.9%)로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기록했다.

뒤이어 '신규 수출시장 개척·공략'(30.3%), '제품 다변화 등 시장 저변 확대'(29.6%), '현지 생산 등 가격경쟁력 확보'(21.2%) 등 순이었으며 '대응 전략 없음' 비율도 13.8%나 됐다.

기업들이 꼽은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관계기관들의 지원 정책은 '국내 산업 보호·조치 강구'가 38.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32.9%), '신규시장 개척 지원'(32.2%), '무역금융 지원 확대'(12.5%), 'FTA 관세 혜택 활용 지원'(11.2%)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가뜩이나 내수부진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중국 제품들의 제품 떠밀기에 지역 업체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설비투자 지원 및 보조금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기업들도 자구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가 전국 제조기업 22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27.6%가 중국 제품의 저가 수출로 실제 매출·수주 등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으나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기업이 42.1%로 우리 지역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수출기업의 37.6%는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답해 같은 응답을 선택한 내수기업(24.7%)을 크게 앞서면서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따른 피해는 국내 내수시장보다 해외 수출시장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불산단 492억원 들여 노후시설 개선 경쟁력 높인다

국토부 재생사업 전국 3곳 선정 내년부터 3년간 도로·공원 등 정비

대불국가산단의 노후 시설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산단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단지에 대한 공모를 거쳐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선정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산단은 대불산단을 비롯, 부산 명지녹산산단,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산단 등 3곳이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단 중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구'(대개조 사업구)로 지정된 산단에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과 지원시설을 확충,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대불 국가산단에 총사업비 492억원(국비 246억 원·지방비 246억 원)을 투입, 오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공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영암 대불산단은 서남권 경제의 핵심 거점이지만 준공 후 27년이 지나 기반 시설이 노후하고 선박 블록 제조 분업 위주의 조선업 업황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이 발생해 산업구조 다변화와 산업단지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남도도 지난 2022년부터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영암 삼호, 해남 화원, 목포 삼진 일반산단을 연계해 27개 사업(3571억)을 추진하는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정주 여건 향상 등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거점으로 재도약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물정보 전광판 설치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는 6일 여수 다압면 사무소 앞에 다압 취수장 취수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

여수권지사는 전광판 설치에 앞서 다압면사무소와 다압면 발전협의회 등 주민들과 전광판 운영 업무분장에 대한 협의를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여수권지사는 전광판 설치로 지역 주민들에게

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ESG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관계자는 "주민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어 기쁘고, 이번 전광판 설치로 통해 다압취수장 취수량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우려를 불식하고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안세영·김가은 삼성 올림픽 체험관서 '찰칵' 2024 파리올림픽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방문한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왼쪽)이 배드민턴 동리 김가은과 포토존에서 셀피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빵집 출점 규제 5년 연장...수도권 거리 제한은 400m로 완화

점포 신설 2%이내서 5%이내로

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시 기존 점포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허용되고 중소빵집과 거리 제한은 수도권에서는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연장 협의를 도출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2013~2019) 지정에 이어 2019년부터 민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이달 종료되는데 다시 오는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된다.

그 대신 기존에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는데 이제 5% 이내로 변경된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으로는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푸드, 파리크라상 등 5곳이 참여했다. 기존 협약에는 9곳이 참여했는데 대부분 폐업한 곳들이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내

빵집의 성장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합의했으며 더본코리아(떡다방 빵연구소)는 이번 협약에 신규 참여했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는 2012년 1만 3577개에서 2022년 2만 8070개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1만 198개에서 2만 2216개로 늘었다.

제과점업 소상공인 매출액은 2012년 1조 4937억 원에서 2022년 2조 2121억 원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광주경총 “노란봉투법 경영활동 위축 시킬 것”

국회가 지난 5일 통과시킨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지역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양진석 회장 명의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위축 시킬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광주경총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22대 국회에서 보다 강화된 법안이 통과됐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광주경총은 개정안이 불법 정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정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광주경총은 "노란봉투법은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고 정상적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정 책임을 강화하고 정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골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경총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 강화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회원사들에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계 권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들이 최근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화재·폭발 사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가연성 금속 취급 사업장과 1·2차 배터리 제조 사업장에서는 폭발 및 화재 피해가 급속도로 번지는 점을 고려해 철저한 위험성 평가와 수분 접촉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근로자 대피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등도 주문했다.

아울러 경총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화기 작업 및 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화재 유형에 따른 적절한 소화 기구 및 방재 도구를 비치하도록 당부했다.

경총은 권고 전달과 함께 화재·폭발 사고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장을 위해 핵심 안전 수칙과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절차를 담은 '중소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대응 매뉴얼'도 발간했다.

안전 수칙은 ▲ 작업 전 환기 및 가연물 제거 ▲ 화재·폭발 발생 원인(점화원) 관리 ▲ 화재감시자 배치 ▲ 소화 대책 수립 등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KT 26일까지 선호번호 1만개 추첨 이벤트

KT는 오는 26일까지 '선호번호 추첨 이벤트'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선호번호는 식별이 용이한 휴대전화 번호 뒤 4자리로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번호이다.

이번에 응모할 수 있는 선호번호는 총 1만 개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다. KT는 지난해부터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선호번호를 연간 1만 개로 늘려 고객의 당첨 확률을 높였다.

통상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선호번호는 국번과 뒷자리 번호가 똑같은 'ABCD-ABCD'형이다.

선호번호를 원하는 고객은 KT 매장 및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모바일 고객센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KT 고객센터 아니라 타 통신사 및 알뜰폰(MVNO) 이용 고객도 참여할 수 있다. 당첨 결과는 오는 29일 KT닷컴과 모바일 고객센터 마이케이티 앱에서 발표된다. /연합뉴스